

주제

3



## 다양한 정의관으로 본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이 주제를 배우면]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학습 요소]

자유주의적 정의관 /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 개인선 / 공동선

도입 활동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목초지가 있다. 여기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소를 놓아 풀을 먹일 수 있다. 어느 날 마을 사람 중 한 명이 몇 마리의 소를 더 사들여 공유지의 풀을 먹게 하였다. 이를 본 이웃들도 더 많은 소를 사들이기 시작하였다. 공유지에는 점점 더 많은 소가 들어차게 되었고, 새로운 풀이 자랄 겨를도 없이 풀이 사라지면서 공유지는 황무지가 되고 말았다. 결국 아무도 소를 기를 수 없게 되었다.

**Q** 개인의 자유를 무제한으로 허용하면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 I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정의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는 누구나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의롭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점이 다양할 수 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폭력·선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웹툰을 둘러싸고 “정부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다.”라는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 사이트를 고소했다. 이 사이트에 연재되는 한 웹툰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을 다수 담고 있는데도 △△ 사이트는 이를 아무런 제재나 안전망 없이 청소년이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들며 규제 강화에 맞서고 있다. 한 시민 단체 관계자는 “규제 강화는 결국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 『디지털타임즈』, 2016. 7. 7. -

**?** 웹툰 규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까닭은 무엇일까?

위 사례와 같이 폭력성과 선정성 논란을 일으키는 웹툰을 규제하는 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공동체의 건전한 가치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정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이러한 규제 정책이 자칫 개인이 갖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정의롭지 않다고 보기도 한다.

이처럼 무엇이 정의로운지에 대한 판단은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가치 중 무엇을 더욱 중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정의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관점에는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이 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 자유주의에서는 정의를 개인의 자유와 연관 지어 바라본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보는 사상으로, 개인이 공동체의 전통이나 가치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임을 강조한다. 자유주의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목적과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공동체를 포함한 누구도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따라서 자유주의에서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 <sup>▶1</sup> **개인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다. 즉 개인은 어떤 삶이 좋은 삶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체는 공동체에 속한 개인에게 특정한 가치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1 **개인선(個人善)** 개인의 행복 추구나 자아실현 등 개인이 사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공동체주의에서는 정의를 공동체의 가치와 연관 지어 바라본다. 공동체주의는 인간의 삶에서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를 중시하는 사상으로, 개인이 공동체의 영향을 받으며 소속감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공동체주의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올바르게 유지되고 발전할 때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으므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에서는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sup>▶2</sup>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다. 즉 공동체는 공동체 속의 개인이 사회적 유대감과 책임감, 배려와 사랑 등의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하고 공동체가 공유하는 좋은 삶의 모습을 추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2 **공동선(共同善)** 특정 개인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것, 즉 공공의 이익을 말한다.

### 웹툰 규제,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따르면 공동체는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웹툰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일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면, 이는 정의롭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따르면 개인은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나 윤리를 존중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정 웹툰이 공동체의 가치를 해칠 수 있다면, 이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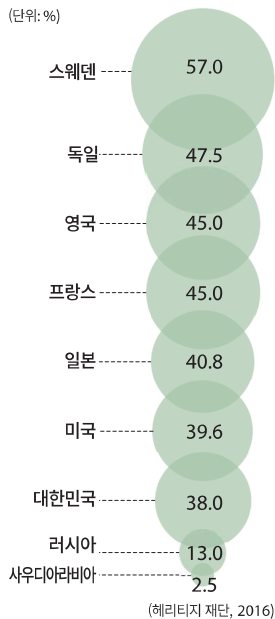


## I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 **3 부유세**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에 재산의 일정 비율을 비례적 혹은 누진적으로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 주요 국가의 소득세 최고 세율 (단위: %)



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고소득층에 부과하는 소득세 최고 세율은 국가마다 차이가 난다. 이는 고소득층의 소득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매기는 것이 정의로운지에 대한 구성원들의 판단과 합의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 ▶3 프랑스 정부, 결국 부유세 폐지

연합뉴스, 2015년 1월 1일

프랑스 정부가 많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부유세 제도를 결국 폐지했다. 현지 언론은 높은 연봉을 받는 직원을 둔 기업에 최고 75%까지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프랑스 정부의 부유세가 올해부터 폐지되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2012년 최고 세율이 75%에 달하는 부유세 도입 계획을 밝히자, 세금 폭탄을 피하려는 프랑스 부자들의 외국 국적 취득 붐이 일기도 했다. 고액 연봉자가 많은 프로 축구단은 정부의 정책에 항의해 경기 일정 취소까지 불사하겠다고 정부에 맞서기도 했다.

### 뉴욕 주 갑부들, 부유세 내겠다

매일경제, 2016년 3월 23일

미국 뉴욕 주의 갑부 40여 명이 의회에 '상위 1% 부유세'를 부과해 달라는 청원서를 냈다. 청원서에는 어린이 빈곤과 노숙자 문제 등의 해결에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소득 상위 1%를 대상으로 증세해야 한다는 갑부들의 요구가 담겨 있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우리 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부를 축적한 주민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공정한 몫을 부담할 능력과 책임이 있다. 우리는 현재 세금을 잘 낼 수 있으며 더 많이 낼 능력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 부유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유세에 대한 찬반 견해 차이가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위 사례에는 부유세 제도를 둘러싼 서로 다른 견해가 드러나 있다. 한편에서는 고율의 부유세 제도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이에 정면으로 맞서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부유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각각 부유세 제도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개인선의 실현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과도한 부유세가 스스로 노력하여 얻은 재산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정의롭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공동선의 실현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부유세를 통해 모든 공동체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 즉 공동선을 증진할 수 있다면 부유세는 공동체에 대한 구성원의 의무로서 정의롭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과 공동체는 때로 대립하는 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때 개인과 공동체 중 어느 한쪽만을 지나치게 중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개인선의 실현이 자연스럽게 공동선의 실현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주의적 관점이 아무런 제한 없이 오직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변질할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공동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반대로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공동선의 실현이 자연스럽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구성원 각자의 개인선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주의적 관점이 개인의 권리를 경시하고 집단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집단주의로 변질하면,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여 개인선의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 중 어느 한쪽만을 지나치게 중시해서는 안 되며, 양자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바라보고 둘의 조화를 지향해야 한다. 즉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적극적으로 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가 적절히 이루어질 때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정의로운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 개념 파료실

### 우리 헌법에 나타난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



####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동시에 제2항에서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즉 재산권 행사를 개인의 권리로 보장하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사회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있다.

**Q**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이야기해 보자.

#### 스스로 확인

- 1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 ( )을/를 실현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다.
- 2 개인과 공동체의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인지 서술해 보자.





- ☒ 비판적 사고력 및 창의성
- ☒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 능력
- ☒ 자기 존중 및 대인 관계 능력
- ☐ 공동체적 역량
- ☒ 통합적 사고력

• 우리나라의 낮은 투표율을 해결하기 위해 투표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있다. 의무 투표제를 도입해야 할지 토론해 보자.

## 자료 1

## 오스트레일리아의 의무 투표제 시행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연방 선거 참여를 납세나 교육의 의무처럼 국민의 의무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에 불참할 경우 20오스트레일리아 달러(약 1만 7,000원)의 벌금을 물린다. 이처럼 연방 정부 차원에서 선거를 국민의 의무로 정한 것은 약 100년 전인 1924년이다. 오스트레일리아 선거 관리 위원회(AEC)는 투표를 강제하는 것이 정치 참여의 장점을 알게 해 주고, 의회가 유권자의 뜻을 더 정확히 반영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보자들은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보다 선거 공약에 힘을 모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투표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비민주적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릇된 정보를 가진 사람이나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도 투표소로 향하게 하는 만큼, 이는 '묻지마식 투표'나 무효투표 수를 늘릴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의무 투표제의 시행은 투표율을 크게 높였다. 의무화 이전인 1922년에는 투표율이 59.38%였지만, 2013년에는 93.2%를 기록하는 등, 의무화 이후 오스트레일리아의 투표율은 대체로 95%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16. 6. 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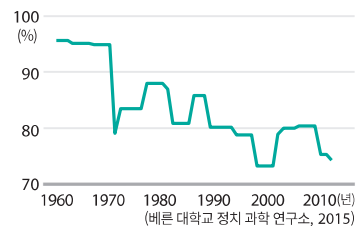


## 자료 2

## 네덜란드의 의무 투표제 폐지

네덜란드는 1917년 헌법을 개정하면서 비례 대표제와 함께 의무 투표제를 도입했다. 당시 정부는 투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무이며, 비례 대표제가 진정한 의미에서 '비례'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100% 투표율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의무 투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1967년 네덜란드 정부에 의해 임명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무 투표제 폐지를 권고했다. 첫째, 투표할 권리는 시민의 개인적인 권리이다. 둘째, 투표 불참자에게 실제로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 셋째, 자유 투표를 시행하면 유권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정당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넷째, 의무 투표제 아래서 투표율은 실제 정치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지 못한다. 네덜란드는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1970년부터 의무 투표제를 폐지했다.

-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각국의 선거 제도 비교 연구 2015』 -



네덜란드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1 [자료 1], [자료 2]를 토대로 의무 투표제의 장단점을 분석해 보자.

장점	
단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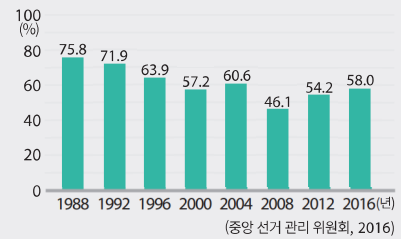
자료 3

우리나라의 낮은 투표율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가장 잘 대변해 줄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함으로써 주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선거 참여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선거가 중요한 의미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선거권 획득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지고 각종 언론에서 홍보하며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거 참여율은 낮은 편에 속한다.

- 『인천일보』, 2016. 3. 31. -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



2 [자료 1] ~ [자료 3] 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의무 투표제를 도입해야 할지 모둠별로 토론회를 보자.

	찬성 측	반대 측
주장	의무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의무 투표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근거		
상대측 반론		
재반론 및 보완		

토론 과정 길잡이

- 1 근거를 낼 때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적 이유, 사례, 기대 효과 등을 제시한다.
- 2 자신의 논거에 상대측이 제기하는 반론을 꼼꼼히 적고, 타당한 반론인지 검토한다.
- 3 상대의 반론에 재반박할 경우, 상대측 반론의 부당함을 밝히고 자신의 논거를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해 제시한다.

토론 활동 평가하기  
(항목당 5점 만점으로 점수 부여)

- 1 정확한 표현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였는가?
- 2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는가?
- 3 상대의 반론을 존중하고 자신의 논거를 보완하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는가?